

농림축산식품부

11.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‘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’ 추가

| 농림축산식품부 | 방역총괄과 (☎ 044-201-2363)

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됩니다.

* 이력관리란 축산물의 도축·포장처리·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것

●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·판매하는 축산물(쇠고기·돼지고기)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였으나,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합니다.

-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(쇠고기·돼지고기)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,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하여야 합니다.

|참고|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(www.mtrace.go.kr)

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자 확대

- **추진배경** 식육판매업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자에 추가
- **주요내용** ① “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”를 유통·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추가
- (현행) 식육판매업자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
→ (개정안) 기존 +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
- **시행일** 2017년 7월

12.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

| 농림축산식품부 | 방역총괄과 (☎ 044-201-2353)

2017년 상반기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아 법적 강제력이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.
- 이에 따라,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, 당초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.

|참고| 국가법령정보센터>법령조회>수의사법

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

- 추진배경 무면허 동물 진료를 통한 동물학대 예방
- 주요내용 현행 무면허진료 시 벌칙(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강화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
- 시행일 2017년 6월

13.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
| 농림축산식품부 | 재해보험정책과 (☎ 044-201-1728)

다수의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.

- 대상품목은 '16년 66개 품목에서 '17년에는 시설쑥갓, 무화과, 유자, 메밀, 브로콜리가 추가되어 71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.
-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5종(배, 단감, 사과, 뽕은감, 감귤)에 대해서는 '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.
 - 특히,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고, 감귤의 경우 부피과·부패과 등 품질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할 계획입니다.

[참고]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 '17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

2017년도 농업재해보험 보장 확대

-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여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
- 주요내용
 - 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[신규 5품목 : 시설쑥갓, 무화과, 유자, 메밀, 브로콜리]
 - ② 과수5종(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, 감귤)에 대한 일소피해 보장
 - ③ 감귤에 대한 보상방식 변경(낙과피해 보상 → 부피과·부패과 등 품질피해 보상)
- 시행일 2017년 2월

14.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

| 농림축산식품부 | 재해보험정책과 (☎ 044-201-1793)

2017년 1월부터 농업인이 생존보장 보험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

- 주계약 4형은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줄이고(5천만원 → 3천만원), 휴업(입원) 급여는 상향(20천원 → 35천원),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을 인상(30만원 → 50만원) 하였습니다.

또한, 농기계로 인한 상해시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

- 농기계상해특약은 기존의 자기신체손해(주계약)에서 보장하던 보상(사망·부상·후유장해)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위자료·휴업손해 등도 보상하도록 하였으며,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상해특약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[참고]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 '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

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보장수준 강화 및 농가 선택 폭 확대

- 추진배경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
- 주요내용 ① (농업인안전보험) 주계약 4형 신설
*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 하향(5천만원 → 3천만원), 휴업(입원)급여상향 (20천원 → 35천원),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 인상(30만원 → 50만원)
② (농기계종합보험) 농기계상해특약 신설(자기신체손해 + 위자료·휴업손해 등까지 보상),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특약중 선택 가능
- 시행일 2017년 1월

15.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

농림축산식품부 |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.

- 전파 위험성이 큰 병해충이 유입된 경우에도 해당 병해충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,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-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, 농진청,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* 규제병해충 : 식물방역법 상 소독·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해충
 - * 방제대상 병해충 : ‘예찰·방제대책 협의회(농진청 주관)’에서 방제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
-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대상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[참고]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>법령>식물방역법

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내용

- 추진배경 국내 병해충 발생대응체계 강화
- 주요내용
 - 식물의 재배자에게 병해충 발생신고 의무 부과
 - (현행) 신고의무 없음 → (개선)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
 - (신고대상)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,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
- 시행일 2017년 12월 3일

16. ‘병해충 전염우려물품’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

농림축산식품부 |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‘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(병해충 전염우려물품)’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- 이는 고위험 흰개미* 등 일부 병해충이 현행법상 검역대상(식물 등)이 아닌 ‘목재가구’나 ‘폐지’ 등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수입검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
* 농업·입업 등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중흰개미, 건재흰개미를 의미하며 주로 목재나 가구 내부에 서식처를 확보하여 번식

-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소독·폐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.

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>법령>식물방역법

‘병해충 전염우려물품’ 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

- 추진배경 유해 식물병해충 유입차단 체계 보완
- 주요내용
 -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해충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도록 함
 - (현행) 식물 등 기존검역물품 → (개선) 기존검역물품 + 병해충전염우려물품 (이사물품, 목재가구류, 폐지, 침목 등)
 -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소독·폐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
- 시행일 2017년 12월 3일

17.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

농림축산식품부 |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우편물 외에 택배(탁송품)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* 특급탁송품은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: ('12년) 13천건 → ('13년) 15천건 → ('14년) 405천건 → ('15년) 602천건

●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통관을 방지하고자, 현행 탁송품의 통관체계를 고려하여 탁송업자를 수입검역신고 주체로 지정·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 시 이를 검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.

[참고]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>법령>식물방역법

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

- 추진배경 유해 식물병해충 유입차단 체계 보완
- 주요내용
 - ‘관세법’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
 - (현행) 수입자가 직접 검역신청을 하거나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검역신청 (개선) 해당 탁송품을 접수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기관에 고지
- 시행일 2017년 12월 3일

18.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 |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식물검역대상물품(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·용기)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그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,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·대행하여 처리하였으나,
 - 2017년부터는 ‘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신고대행자’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-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.

[참고]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>법령>식물방역법

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

- 추진배경 수입식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
- 주요내용
 -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검역신고를 대행하게 함
 -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
 -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대행자가 관련법규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함
 - (현행) 검역대행자 자격조건 없음 (개선)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자에게만 검역대행 자격 부여
- 시행일 2017년 12월 3일

19.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

농림축산식품부 |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·품목명·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(tag)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.

* 격리재배 대상식물 : 묘목·종자 등의 식물은 아직 잎이나 꽃 등이 나지 않아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의 부착유무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, 이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정밀검사를 위한 격리재배를 실시하도록 함

- 이는 그간 소유자들이 격리재배중인 묘목들을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,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것으로,
- 부착된 꼬리표(tag)를 고의로 위·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[참고]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>법령>식물방역법

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

- 추진배경 수입식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
- 주요내용
 - ① 격리재배대상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, 수입일,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묘목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
 - ② 누구든지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·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
- (현행) 꼬리표 부착의무 없음 → (개선) 묘목의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꼬리표 부착 의무 신설
- 시행일 2017년 12월 3일

20.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

농림축산식품부 |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연구용, 농업유전자원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제한하였으나,
-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하고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됩니다.

참고 |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>법령>식물방역법

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

- 추진배경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
- 주요내용
 - 금지품 중 다시 포장·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하는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·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 및 기간 등 특별관리 조건으로 국내 반입을 허용
 - (현행) 수입금지품 수입허용 조건 : 시험연구용, 농업유전자원확보용, 국제박람회용 → (개선) 특별 관리를 통한 재수출용 포함
- 시행일 2017년 12월 3일

21.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 |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2017년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(종이문서)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(IPPC)의 표준서식에 맞는 ‘전자식물검역증명서’의 제출이 가능합니다.

* IPPC :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195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3년 가입

** 2011년부터 국제식물보호협약(IPPC)에 따른 국제기준(ISPM No12)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식물검역증명서를 허용하고 있으며, '14년 3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표준서식이 제정(ISPM No12 appendix 1 신설) 됨

● 이로 인해 현행 식물검역증명서(종이문서)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·파손·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, 원본 미보완 시 폐기·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,

-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사용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참고]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>법령>식물방역법

전자식물 검역증명서 제도 도입

- 추진배경 민원편의 증대 및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·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·전송하여야 함
 - ②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‘국제식물보호협약’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함
 - (현행) 종이 문서인 ‘식물검역증명서’만 인정 →
 - (개선) ‘전자식물검역증명서’도 인정
- 시행일 2017년 12월 3일

22 할랄·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‘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’ 운영

농림축산식품부 | 수출진흥과 (☎ 044-201-2179)

2017년부터 ‘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’를 통해 할랄·코셔 등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 인증 관련 정보·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*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7조의3 신설('16.12.2. 개정, '17.3.3. 시행)

● 말레이시아,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·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센터(1899-0559)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할랄·코셔식품 시장 동향, 통관·검역 등의 정보와 돼지고기·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, 할랄·코셔 식재료 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참고]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halal.kfri.re.kr>), 상담실(1899-0559)

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주요 사업

- 추진배경 할랄·코셔 등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·기술 등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
- 주요내용 ① (정보제공) 할랄·코셔식품시장 동향·통관·검역, 국가별 인증제도 등 정보제공
② (인증지원) 돼지고기·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, 할랄·코셔 식재료 DB 구축·제공, 해외 할랄인증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
② (인력양성) 식품 생산·수출업체 등 대상 단계별 교육 제공(기초·심화)
- 시행일 2017년 3월(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는 '16.4월부터 운영 중)

23.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

| 농림축산식품부 | 농업금융정책과 (☎ 044-201-1757)

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·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.

-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어, 농협중앙회·농협경제지주회사·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.

* 농협중앙회(경제·금융사업 수행)를 중앙회, 경제지주, 금융지주로 분리

- 지난 6년간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법적·세무적 지원을 이행하였고, 농협중앙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.

* 농협 사업구조개편 : ('12.3월) 금융사업 이관, ('15.2월) 판매·유통사업 이관, ('16.12.31) 나머지 경제사업의 완전 이관

앞으로,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(지역농·축협, 품목조합)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·지원에 집중하고,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하여 농축산물 판매·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

|참고|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, 6년간의 사업구조개편 이행 완료

농협 사업구조개편 주요내용

- **추진배경** 농업인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·유통 등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'11.3월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
- **주요내용** ① '17년 이후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하는 교육지원과 상호금융사업 수행
② 경제지주는 기존 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자회사 혹은 지주 본체에서 사업 수행)
- **시행일** 2017년 1월 1일